



민주주의 수호자는 누구인가?



2014.05.22 | 이은경_새사연 연구원 | eundust@saesayon.org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세월호의 여파에도 어김없이 선거철은 다가왔고 ‘선거의 여왕’은 눈물로 반전을 호소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선거와 정치제도가 대다수 국민의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는 모순은 왜 발생하는가? 저소득층이 보수화되고, 진보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일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탐색하지 못한다면 그런 설명이 타당할 것이다. “내가 뽑지 않았다. 뽑은 사람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는 단견을 벗어나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거와 정치, 왜 중요한가?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세월호로 인해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지만 우리의 정치인들은 이미 선거체제로 돌아섰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국민 앞에 눈물을 보였고, 곧이어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순방 외교길에 올랐다. 정당들과 정치인들 역시 세월호 사건 앞에 한껏 몸을 낮추고 있지만 뒤로는 선거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하느라 바쁘다. 한국 사회에서 선거는 매우 이중적으로 이해된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냉소 속에 한바탕 정치쇼로 다루어지는 측면과 몇 표 되지 않는 0.1%의 격차라도 어떻게든 이기기만 하면 모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정치=선거’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각자도생의 정글이다. 최저 출산율과 최고의 자살률,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경쟁과 불안이 파리를 틀고 있다. 아이들은 다른 나라의 2배가 넘는 공부시간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행해졌지만 그렇게 공부해서 들어간 대학은 등록금과 주거비로 허덕이는 잔혹한 현실이다.



부자부모를 둔 대학생과 알바를 해야만 하는 학생은 스펙경쟁부터 차이가 나, 들어갈 수 있는 회사부터 달라진다. 대기업은 수출과 국내 독점으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성장의 열매는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에서 고용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이윤을 가로채니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희망이 없다. 그 결과 내수경기가 침체되어 영세자영업과 비정규직은 기본 생활비도 벌지 못하고, 생계형 가계대출은 고리의 이자를 내야하는 제 2 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감세정책과 규제완화는 정부가 복지를 할 수 있는 돈을 줄여 거리로 쫓아져 나오는 실업자, 노인,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사회안전망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사치가 되어버렸다.

질문은 이렇다. 대한민국의 이런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취약한 사회안전망, 그로 인한 사회불안과 삶의 불행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투명한 경제체제 내에서 존재하는 순수한 시장결과가 아님을 누구나 알고 있다.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감세, 규제완화, 각종 기업지원제도, 노동자나 시민들의 분배와 경제활동 감시에 대한 규제 등 곳곳에 숨어있는 ‘정치적’ 제도들이 경제적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다. 문제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이해와 상반되는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다.

정치는 선거만이 아니다. 대선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꾸린 행정부와 총선을 통해 선출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입법부, 즉 청와대, 국회, 관료조직이 법과 제도, 행정을 통해 한국 사회의 모든 이슈를 다루는 과정 전부가 정치이다. ‘선거=정치’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그들에 의해 꾸려지는 정부조직을 국민들이 선택하는 과정”이 결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과연 선출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들이 그들에게 표를 던진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지는 보다 복잡한 분석이 필요한 사안이다.

보수화된 중하위층?

19대 대선 이후 가장 많이 나왔던 반응은 ‘저소득층의 보수화’, ‘복지가 필요한 계층의 반복지적 선택’ 등이었다. 소위, 계급적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이런 문제제기는 먼저 미국에서 있었다. 여기에는 ‘왜 가난한 자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등의 책에서 다룬 “**자신의 삶에 도움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가난**



한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있다. 남북전쟁 이후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지역이었던 남부가 완고한 공화당 지지 지역으로 변모하면서 가난한 백인 노동자 집단의 보수화가 미국 정치구도를 우경화시킨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60년대 흑인인권운동, 페미니즘, 생명, 평화와 반전운동 등 비물질적인 이슈가 진보운동을 주도하면서 공화당은 가난한 백인 노동자들의 소외심리를 자극했다. 여기에 기독교 보수주의 운동이 공화당과 결합하면서 가족, 공동체, 자유, 도덕 등으로 포장된 잘못된 보수적 이데올로기가 미국 저소득층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논의는 ‘도덕의 정치’,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등으로 알려진 조지 레이코프를 비롯한 미국 정치학자들의 주요 연구주제가 되었고, 민주당이 일반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프레임을 선점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졌다. 진보가 옳음, 정당함을 가지고 대중을 ‘논리적’으로 ‘설득’ 하려는 순간, 보수적 이데올로기에 밀려 프레임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고 대중은 스스로의 이해관계가 아닌, 잘못 구성된 이데올로기에 의해 투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저소득층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있다. 소득불평등이 선거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주류학자들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선거에 참여하는 다수의 소득이 낮아지면, 분배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져, 소득재분배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이러한 설명 역시 실제 투표로 드러나는 현실과 맞지 않다. 여기서 ‘부자들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¹⁾ 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장을 간단히 짚어 보자.

이 책의 두 저자들은 미국의 저소득층은 실제로는 보수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길렌스²⁾의 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책 변화는 법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나 부유층이 지지하는 정책은 법제화된 사례가 많았다. 사실상 빈곤층의 의견은 정책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중산층의 의견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계층에 따라 투표하고 있고 그 경향은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다고 한다. 2000년 대선에서 소득 상위 5개 계층의 공화당 지지율은 소득 하위 5개 계층의 두 배에 달했고 이는 다른 나라 격차보다 더 컸다.

유권자들이 이해관계가 아닌 이데올로기적 투표를 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투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안 중 경제문제를 뽑은 유권자는 46년~72년 1/6에서 73년~04년 3/4로 크게 늘었다. 불평등에 대한 인식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양분되어 있다고 보는 비율은 88년 26%에서 07년 48%로 두 배 가까

1) 부자들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송자 독식의 정치학. 제이콥 해커, 폴 피어슨 지음. 조자현 옮김. 21세기북스
2) Martin Gilens. Inequality and Democratic Responsiveness Oxford Journals Social Sciences Public Opinion Quarterly Volume 69, Issue 5Pp. 778-796



이 늘었으며 소득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무려 72%에 달했다.

저자들은 미국 중하위층이 보수화되었다는 진단은 지나치게 피상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분명, 남부지역 백인 하위 노동자 계층의 공화당에 대한 지지와 보수화가 관찰되기는 하지만 미국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킨 정책을 중하위층이 지지하고 있다는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불평등과 불만과 부의 분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치=선거’에서 중하위층의 목소리가 증발되어 버리고 있는 것을 범인으로 꼽는다. 이유는? 선거와 이후 정치과정에서 ‘돈’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져왔고, 그 과정에서 부유층들은 매우 성실하게 자신의 돈과 조직을 이용해서 정치를 장악해왔기 때문이다. 방식은 두 가지이다. 유리한 정책에 대한 적극적 입법활동과 개혁적 정책에 대한 표류작전이다. 논의가 헛돌게 하고 결정을 미루는 방해 역시 정치인 것이다.

한국 중하위층은 보수화되었는가?

그건 미국이야기에 불과할까? 한국은 미국과 달라서 북한, 전쟁, 세대간 갈등, 지역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보다 훨씬 심한 이데올로기적 왜곡이 존재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앞의 책과 같은 자료를 찾을 수는 없지만 ① 중하위층의 정치성향 ② 바람직한 사회상 ③ 현재 불평등의 수준과 해결방식 ④ 불평등의 원인 등에 대한 자료를 통해 한국인, 특히 중하위층이 원하는 사회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³⁾에서 국민들의 복지인식을 조사해왔다. 2013년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복지, 정치인식의 일단을 살펴보자.

가. 한국인이 생각하는 정치성향

한국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정치성향에서는 저소득층의 보수화경향을 찾아보기 어렵다. 전 계층에서 일관되게 높은 비율은 중도층이며 오히려 선택할 수 없다는 비중이 줄고 있다는 점과 일반가구의 진보→중도성향증가와 저소득층⁴⁾의 진보성향 증가가 눈에 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진보적 입장이라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으며 보수적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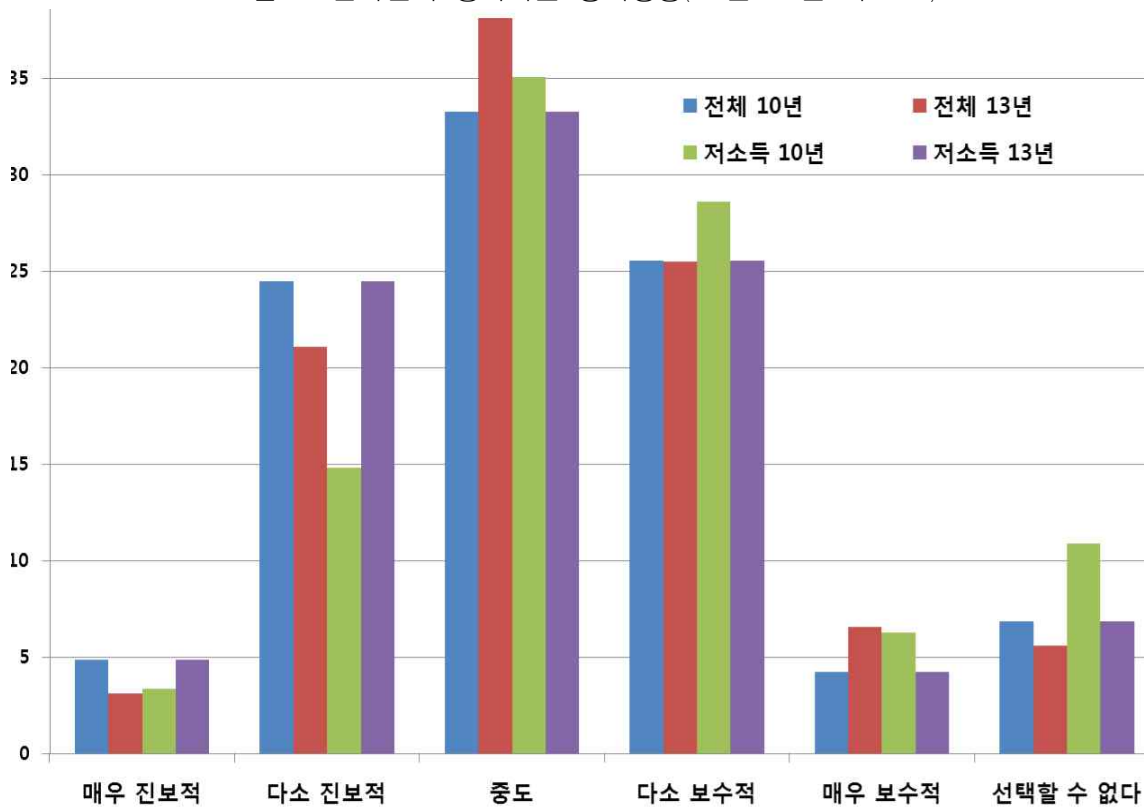
3) 한국복지패널은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종단면 조사로 중위소득 60%미만 저소득층에 전체 표본의 약 50%를 할당하였기 때문에 국내 패널조사 중에서 가장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대상 정책이나 빈곤 연구에 적합한 통계자료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2013년 상반기에 조사한 8차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주로 활용하였고 추가적으로 2010년 조사자료와 비교했다.

4) 본보고서에서 사용한 저소득층의 기준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를, 일반가구는 중위소득 60%이상 가구를 의미한다. 국제적으로 빈곤선의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0, 50, 60% 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대빈곤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50%이다. 본고서의 기준으로 본 한국 저소득층 가구는 05년 27.4%, 06년 27.3%, 07년 26.7%, 08년 26.3%, 09년 24.7%로 국민의 1/4이 포함되는 규모이다.



입장은 그만큼 줄었다. 저소득층의 진보응답률은 2010년 18.16%에서 2013년 29.33%로 크게 늘었고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4.86%에서 29.8%로 줄었다. 전 계층에서 진보 응답자가 29.33%에서 24.16%로 5.17% 줄었지만 저소득층의 증가비율(11.17%)에 비해 격차가 크지 않다. 또한 보수증가율 2.9%에 비해 중도증가율이 4.85%로 저소득층을 제외한 계층에서는 보수화보다는 중도를 선택한 비율이 증가한 것이다. (그림 1)

그림 1. 한국인이 생각하는 정치성향(10년 13년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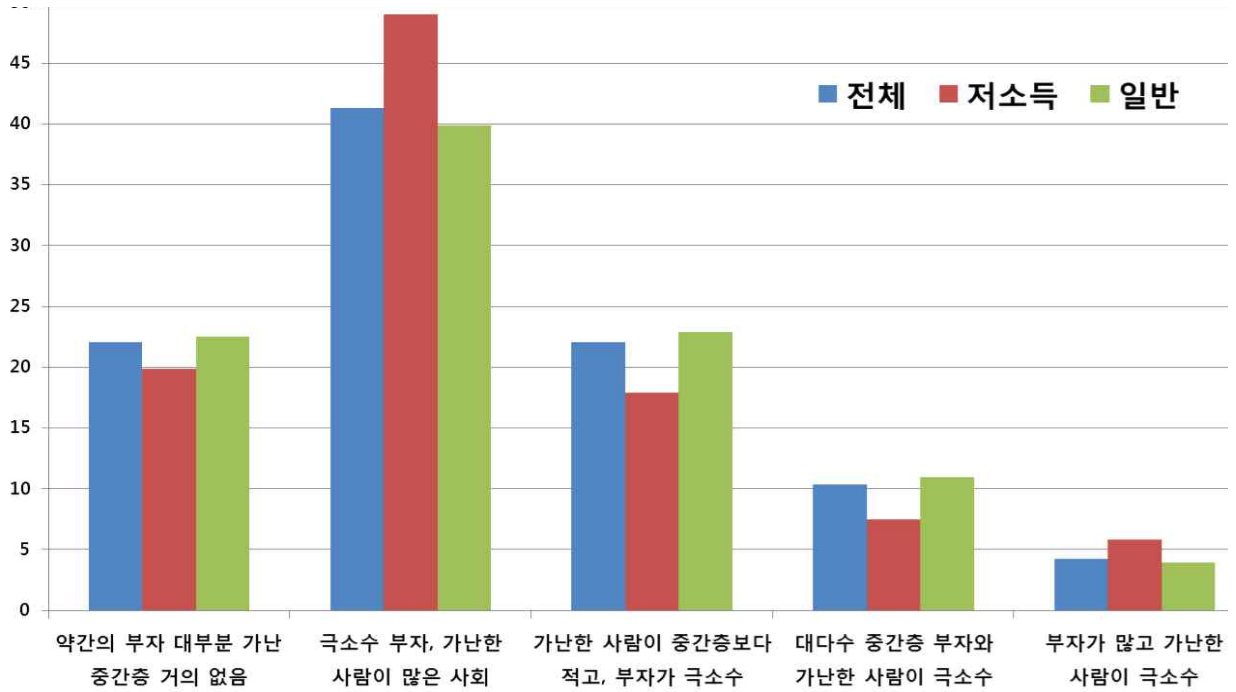
출처: 복지의식 부가조사, 한국복지패널, 보건복지부, 2013 재구성

나. 현재 한국인이 보는 한국사회

그렇다면 한국인이 보는 한국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한국인들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부자가 극소수이고 하층으로 갈수록 사람이 많아져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로 보고 있었으며 미래에는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한국사회를 극소수 부자와 대다수 가난한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소득층이 사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는 이유이다.(그림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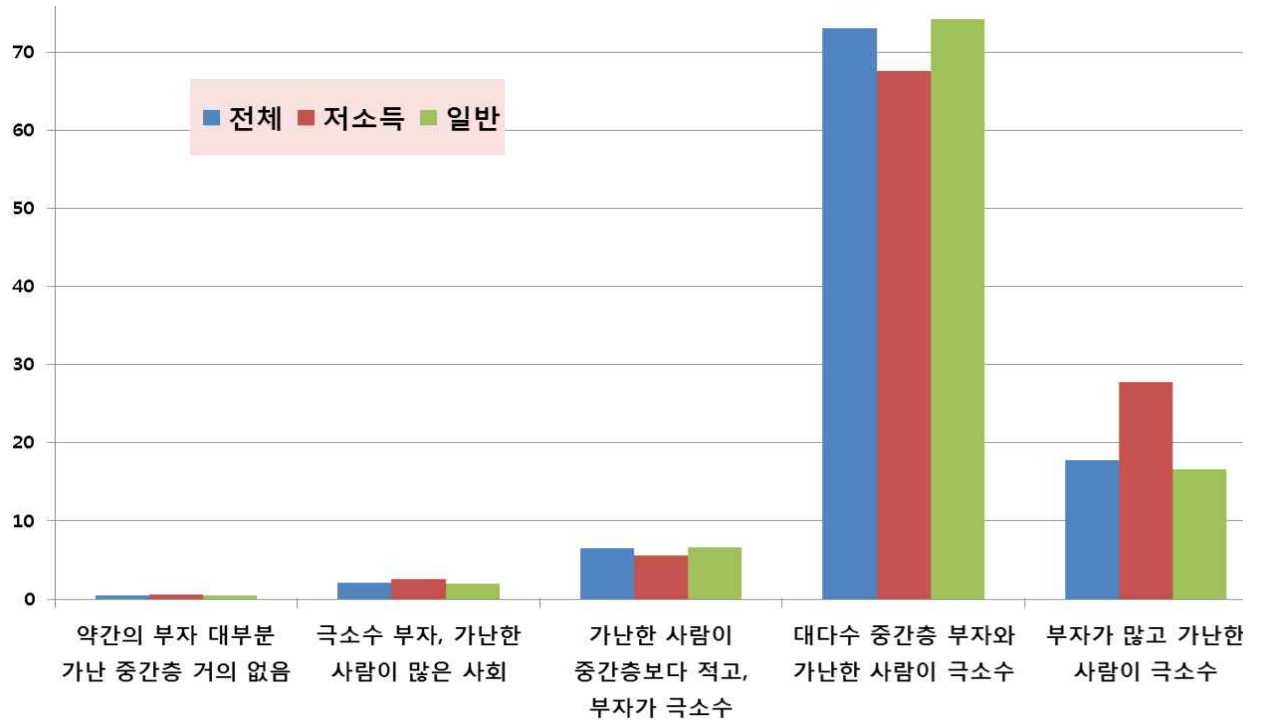


그림 2. 현재 한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사회



출처: 복지의식 부가조사, 한국복지패널, 보건복지부, 2013 재구성

그림 3. 한국인이 향후 바라는 한국사회



출처: 복지의식 부가조사, 한국복지패널, 보건복지부, 2013 재구성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2010년과의 비교는 어떠할까? 전 계층에서 ‘10년에 비해 증가한 응답은 극소수 부자,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와 가난한 사람이 중간층보다 적고,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라는 항목이었다. 한국인들은 대다수가 중간층이거나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를 원하지만 실제의 대한민국은 가난한 사람이 점차 증가하는 사회이거나 극소수 부자와 나머지로 나뉜 사회인 것이다.(그림 4)

그림 4. 한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사회(10년과 13년 비교)



출처: 복지의식 부가조사. 한국복지패널. 보건복지부. 2013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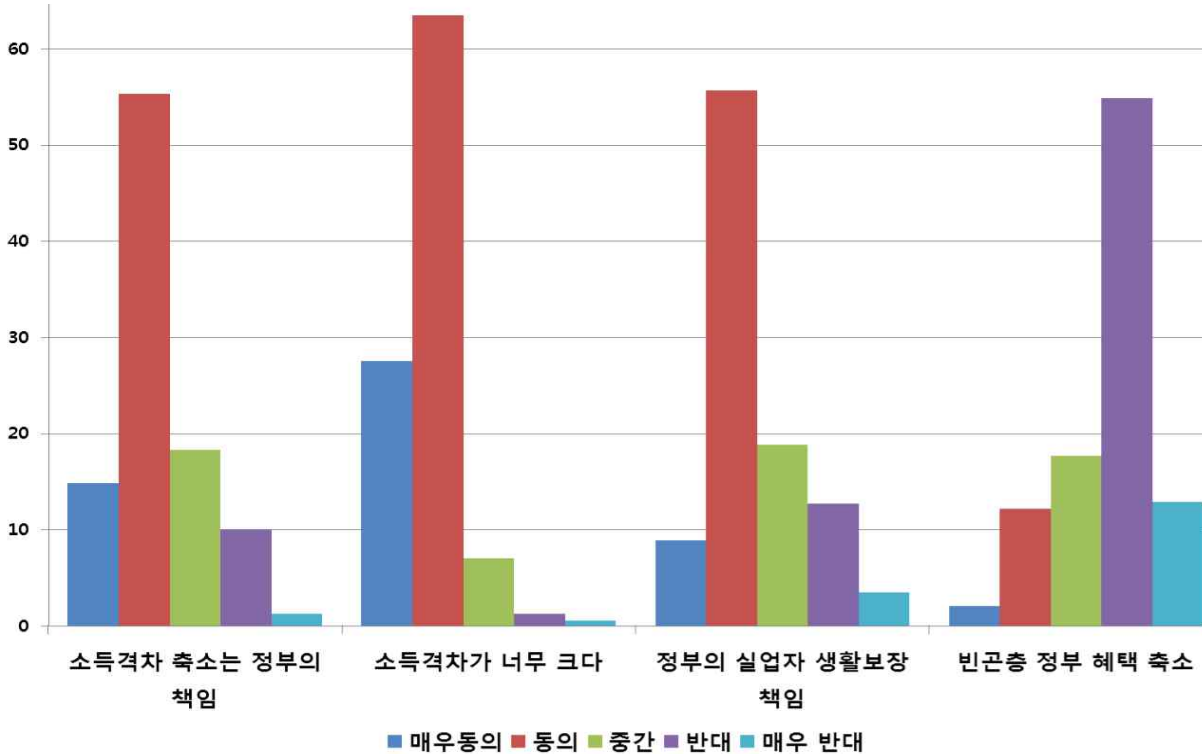
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복지 책임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이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누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한국인들은 압도적으로 현재 불평등은 너무 심하며(91%), 이 불평등의 원인은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70.2%) 또한 정부는 실업자들에게 적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하며(64.5%), 빈곤층에 대한 정부지출을 줄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67.1%) 특히 2010년에 비해 소득이 매우 불평등하다는 응답은 76.94%에서 91%로 크게 늘었고 소득격차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의견은 67.64%에서 70.2%로 증가했다.(그림 5)



이렇듯 한국인의 의견 그 어디에서도 불평등을 인정하는 태도와 정부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부분을 부정하는 보수화의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저소득층의 경우, 전 계층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실업자에 대한 인간적 삶의 보장을 정부가 해야 한다는 비중은 저소득층이 70.94%로 전체 계층 64.52%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림 5. 한국인이 생각하는 복지책임



출처: 복지의식 부가조사. 한국복지패널. 보건복지부. 2013 재구성

라. 한국인이 생각하는 빈곤의 원인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은 빈곤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는지를 살펴보자. 흔히,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이나 나태에서 찾는 나라의 경우, 재분배정책을 지지하는 비율이 낮아진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가난은 개인의 계름 때문이며 가난을 벗어날 기회가 있다고 믿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70%) 더불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지제도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다.(이런 믿음을 가진 88%가 현 미국의 복지제도가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대로 유럽은 소득은 운에 의해 결정되며(54%), 가난한 사람은 빈곤의 탓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많았다.(60%)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국가에 의한 적



극적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는 성향을 지닌다.⁵⁾

복지인식조사에서는 같은 문항으로 설문하지는 않았지만 항목을 개인의 문제와 구조적 문제로 나누어 분석해 볼 수는 있다. 인식조사에서 설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빈곤의 원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책임소재
술 도박 등 절제부족	90.15	개인
동기, 노력부족	89.47	개인
절약, 돈 관리 부족	85.31	개인
질병과 신체적 장애	80.65	구조나 운
낮은 임금	85.66	구조
좋은 일자리 부족	79.34	구조
가족배경 등 불운	65.51	운
교육기회 부족	67.54	구조
편견과 차별	64.15	구조
학력수준	60.76	개인과 구조
타고난 능력	58.1	개인

조사결과는 개인의 절제력이나 노력, 관리 능력 등 개인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설문이 우선순위를 묻는 것이 아니고 각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묻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적 우선순위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주목할만한 내용은 질병이나 장애, 낮은 임금과 질 낮은 일자리, 태어난 가족환경 등 구조적 원인이나 태생적 불운이 원인으로 보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특히 낮은 임금과 일자리, 교육기회는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 개인의 측면도 있지만 구조적 원인으로 일자리와 교육기회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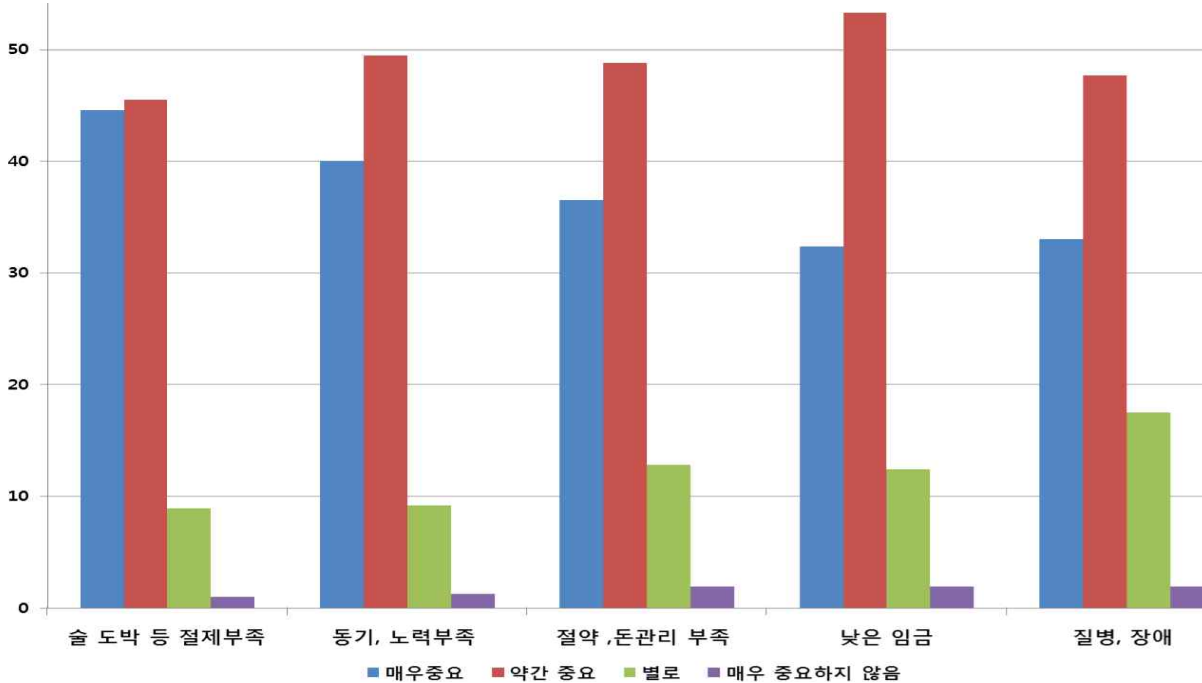
특히 사회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 계층의 41.27%, 저소득층 45.72%가 찬성한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 계층의 29.6%, 저소득층의 24.01%만이 반대하고 있다.(본 조사는 2013년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아 2010년 조사내용임) 여기에 나보다 돈을 더 벌면서도 세금을 덜 내는 사람이 많은지에 대해 전 계층 88.2%, 저소득계층 90.37%이 그렇다고 응답해(2013년 조사), 세금이 정당하게

5) 알베르토 알레시나, 에드워드 글레이저. (하버드 경제학자가 쓴) 복지국가의 정치학. 전용범 옮김. 생각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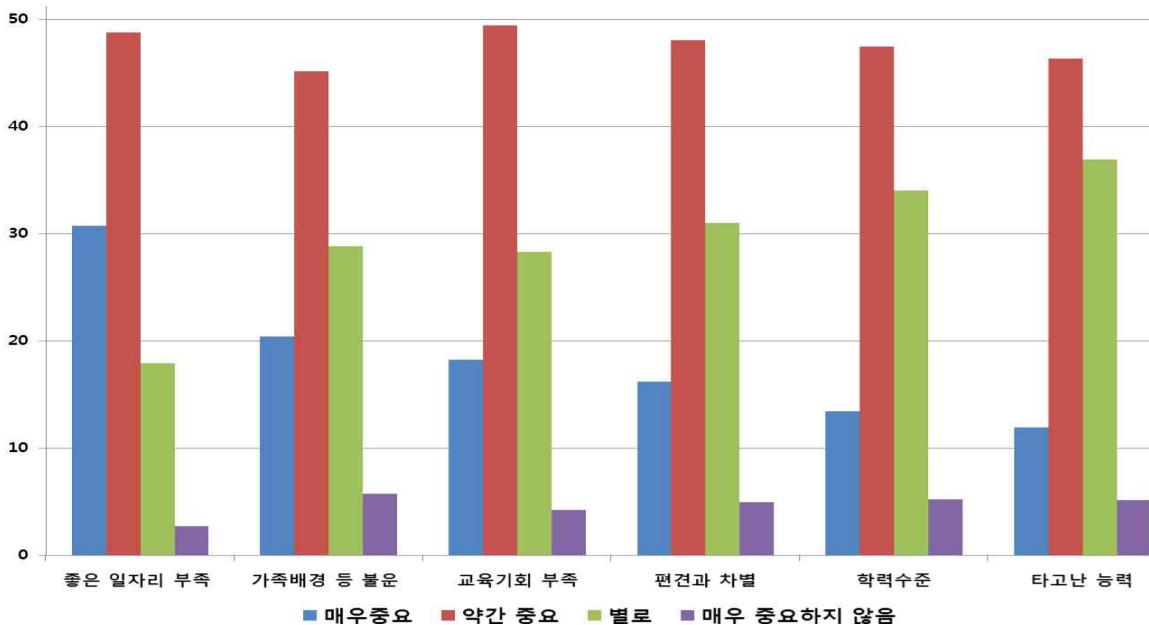
견히고 있지 않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과반수정도가 복지를 위한 세금확충에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조사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의 복지 지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림 6. 복지원인(중요도 높은 순)



출처: 복지의식 부가조사, 한국복지패널, 보건복지부, 2013 재구성

그림 7. 복지원인(이어서, 중요도 높은 순)



출처: 복지의식 부가조사, 한국복지패널, 보건복지부, 2013 재구성



문제는 무엇인가?

가. 표를 준 유권자를 배신하는 정치인

대의민주주의 체계에서 부유층을 제외한 대다수 사람들의 이해는 왜 반영되지 못하는가? 이 질문이 본 보고서의 핵심적 의문이다. 설명은 다양하다.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자신의 이익에 기반한 투표를 하지 않는다.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설득당해 있다.** 등이 그동안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국의 중하위층은 실제 불평등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문제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부가 평등하게 분배되고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있는 사회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낸 범인은 누구인가? 투표를 통해 선출된 정치인들이 자신들을 뽑아 준 유권자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의 저자들은 두 가지 원인을 제시한다. **중하위층은 정치참여도 돈도 지식도 없다는 점과, 부유층은 매우 열심히 한다** 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중하위층은 불평등에 대해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며 재분배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거가 대규모의 서커스쇼가 되어가면서 돈과 조직력, 충분한 지식과 정치참여의 시간이 없는 중하위층의 의견은 정책에서 완벽하게 배제되고 있다.

저자들은 선거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복잡한 정책결정과정도 전부 정치이며 이 과정에서 돈과 조직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역사적 사실을 들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부자들과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재계의 막대한 돈과 강력한 로비의 힘을 앞세운 정치인들이 어떻게 감세정책을 통과시킬 수 있었는지, 노조의 정치적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사용자측의 로비가 어떻게 워싱턴과 지역 상하원을 장악해 들어갔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 결과는? 미국 정치의 양극화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기능 회복과 규제도입, 증세, 사회보장확대는 공화당에게 모두 사회주의 정책이고 민주당의 정책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실제 들어보지도 않고) 반대하는 문화가 구축된 것이다. 또한 양극화 문제는 민주당이 좌로 방향을 튼 것이 아니라 공화당의 극심한 보수화의 결과이다. 공화당은 7-80년대 공화당원들까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보수화-다시말해 친 기업, 반복적, 작은 정부, 규제완화, 감세의 신봉자들이 되어갔다.



여기에서 저자들이 또 제시하는 정치적 파위는 ‘표류’이다. 공화당이 재계와 부자들 ‘만’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면 민주당은 이들의 ‘보험’이 되었다는 것이다.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반대하지 않는 민주당, 규제도입과 증세, 사회보장확대를 위한 정책을 표류시키는 민주당을 만든 것이다. 그 결과 민주당은 90년대 들어 공화당의 절반수준으로 선거자금을 모을 수 있었지만, 그 결과로 미국 정치는 표류하게 되었다.

나. 희생자 비난하기

결론은 이렇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만든 것은 대다수 중하위층이 아니다. 우리들은 소득의 정당한 분배와 안전한 사회보장, 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상황의 개선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선택한 정치인들은 유권자를 배신하고 있다. 선거철이면 표를 호소하지만 선거를 위한 돈을 지불하는 부자들과 기업만이 그들의 유권자일뿐이다. 더 나아가 스스로 선택한 정부이니 무엇을 해도 국민의 뜻을 내세우며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한다. 전형적인 희생자 비난하기이다. **“너희들이 뽑았으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 국민의 뜻이다. 결과 역시 국민의 책임이다.”**

대안은 무엇일까? 저자들은 정치를 바로잡는 것이 불평등을 줄이는 핵심 과제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치를 바로잡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정치제도 역시 경제권력의 힘으로 왜곡되어 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한 분권장치가 다양하다. 결정을 위한 최소 득표기준과 상하원의 복잡한 절차, 의사진행방해 등이 그것으로 권력의 독주를 막는 기능보다는 개혁적 정책을 표류시키고 대중들에게 숨기는 역할로 변해왔다. 복잡한 선거제도와 상하원제도 역시 중하위층 유권자의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여기에 막대한 선거자금을 통한 TV유세와 광고, 이데올로기 공격으로 선거는 한바탕 정치서커스가 된지 오래이다. 정치를 경제권력이 장악해온 것 역시 부유층의 힘이였다.

다. 민주주의 수호자는 누구인가?

한국은 어떠한가? 간략히만 보면, 미국과 가장 다른 것은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핵심 정책에 대한 이해도, 참여의지가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미국은 대공황 이후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강력한 뉴딜정책추진과정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강력한 노조, 시민운동 등 진보적 경험이 있었고 공화당 역시 현재와 같지 않은 모습을 가졌다가 70년대 이후 급격하게 우경화되었다. 반면, 한국은 과거 진보적 정책을 추진한 경험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 글은 한국 정치를 분석하는 글은 아니다. 현재의 정치구



도는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검토한 것이다. 따라서 선거와, 선거를 넘어 정치 영역에 대다수 국민들의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민주주의 수호자는 누구인가? 그 누구도 아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다. 투표는 그 출발이다. 투표를 넘어 지속적인 참여만이 우리의 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길이다. 노동조합, 건강한 시민단체, 감시기구를 만들고 참여해야 한다. 정책을 개발하고 이슈화할 수 있는 진보연구소와 어려운 사회경제적 이슈들을 대중적으로 해설하고 힘을 모아낼 수 있는 언론과 연구집단이 필요하다. ‘그들’은 성실하며 돈도 많고 조직도 탄탄하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항상 성공해왔다. 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수’라는 것 밖에는 없다. 대한민국의 대다수인 우리가 바로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



2014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4년 5월 22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세계경제	1/15	지뢰밭 속 순항?	정태인
한국경제①	1/16	스스로 지뢰밭을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	정태인
한국경제②	1/17	747에서 474로 갈아탄 근혜노믹스	여경훈
복지①	1/20	박근혜 정부식 보건의료, 민영화 폭탄	이은경
돌봄	1/21	진정한 ‘국가 책임 보육’ 이 되려면	최정은
주거	1/24	주택시장 죽이기에 골몰하는 정부, 어찌 하오리까	강세진
노동	1/28	사라진 공약, 반복되는 노동시장 문제들	김수현
복지②	1/29	노인, 대학생, 취약계층 복지 정책 실종	이은경
노동	4/14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에 답 있다.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노동	4/17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는 무엇인가?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노동	4/21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 제안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주거	5/12	노인복지의 주요 이슈, 주거	강세진
한국경제	5/19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 그리고 한국 경제	정태인